

문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않는다”

정부 내 혼선 빚어지자 직접 매듭...대안 모색

당정청 논란 지속되자 정리...반대 여론도 감안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정부 내 혼선이 빚어지자 직접 나서 정리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 최대한 발굴·확보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해 주택 공급 방안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계속 논의 등 3가지 사항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부동산 문제로 인해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직접 논란을 매듭짓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폭등이 지속되자 지난 15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논란을 풀이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혀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에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여러 내 유력인사들까지 나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KBS ‘일요일전라

이브’에 출연해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는 했지만 합의되거나 결정된 적은 없다”며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여기에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김 실장과 다른 톤의 언급을 내놨다.

이처럼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당·정·청 내에서조차 논란이 지속되자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론이 터져 나왔고, 문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도지사와 법무부 장관까지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데 국민이 누구 말을 듣고 신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야. 현재 진행되는 주택정책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이날 정 총리와 주례회동을 통해 이번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총리실에선 정 총리의 건의를 문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던 것도 일정부분 감안됐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4.0%),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60.4%에 달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 비율은 26.5%에 불과했다.

서울시 거주 응답자 중에서도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1.8%(필요 31.7%)였고, 서울을 둘러싼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2.6%였다.

김윤호 기자



통합·국민의당, 추미애 탄핵 소추안 제출

“물러날 때까지 힘 모을 것”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해 온 양당의 공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법무부 장관(추미애) 탄핵 소추안’이 적힌 봉투를 직접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의 인사·지휘권 남용에 따른 법치주의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을 시급하게 교정하고자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공동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 “이번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지 못한 결과를 초래해도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야당은 힘을 모아 탄핵 소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탄핵 소추안이 제출된 후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표결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윤호 기자

이낙연, 오늘 ‘민주당 심장’ 광주 방문... ‘대세론’ 불 지피나

기자간담회·5·18 묘역 참배·5·18 단체 간담회 등 광주 포럼 2천명 활동...전남 포럼 준비 등 조직 가동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당의 심장부인 광주를 찾아 ‘이낙연 대세론’ 확산에 돌입한다.

이 의원은 20일 오전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예정이다.

21일에는 전국 순회 첫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 대표 출마소감을 밝히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다. 5·18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관련 3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이날 5·18 묘역 참배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지자들의 합동 참배나 결집을 자제하고 있으나 상당수 인사들이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광주에는 이 의원을 지지하는 외곽 포럼이 3개 정도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회원수만도 2000여명에 이른다.

이들 포럼은 이 의원이 총리를 맡으면서 하나 둘 구성됐으며, 대선까지 염두해 두고 활동하고 있다.

전남에서도 최근 포럼 구성을 위해 시·군별로 책임자들을 모색하고 있고 조만간 발기인대회를 거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앞서 당권 경쟁자인 김부겸 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의원은 지난 7일과 8일 광주에 머물며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대표 출마에 관한 입장을 밝혔으며, 광주 광산구 선별진료소를 둘러보고 코로나19 대응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29

일 열릴 예정이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전국 대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당 대표 경선은 전국대의원 투표(45%)와 권리당원 투표(40%), 국민여론조사(10%), 당원여론조사(5%)를 합쳐 선출한다.

주호영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적과 내통’

문대통령 “야당이라도 어떻게 그런 말을”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과 내통한 사람’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야당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도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19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보기

관은 적을 추적하고 냉정하게 적을 파악해야 하는데 적과 친분관계가 있는 분이 국정원을 맡아서 과연 되느냐”라며 “전문성이 있는 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우리는 국정원의 과과 내지는 해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박지원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라면 달리 볼 수 있지만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정보기관인데, 내통하는 사람을 임명한 것은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